

2020년 10대 농정이슈

이명기 외

요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01

2020년 농정 여건¹⁾

1.1. 농업·농촌 외적 여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 전망,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3% 내외 전망

세계 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개선이 전망되나, 미·중은 소폭 둔화 전망²⁾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4%로 소폭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1%, 중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6.1%에서 2020년 5.8%로 하향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수요 회복, 국제 유가 하락 전망 등의 상방요인과 미·중 무역분쟁 재개, 남북관계 악화, 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악화 등의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9년 2.0%에서 2020년 2.3% 내외로 소폭 상승 전망
- 완만한 경제 성장세와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2020년 실업률은 2019년(3.8%)보다 낮은 3.5% 수준 전망

4차 산업혁명 전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복합시스템(CPS), 5G 상용화 등 빅데이터 기술이 전(全) 산업분야에 보급·확산되어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생산·유통·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과 농촌 환경 및 삶의 질 부문에 대한 기술혁신 강화

남북관계의 악화 및 신남방·신북방 협력 정책 추진

미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협력 정책 제시 및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협력 준비

- 북미관계 악화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위험관리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사전에 단계적으로 준비 필요
- 신남방정책에 따른 한-아세안 농업협력관계 강화, 새로운 농산물 수출처로 발전

1) 이명기 연구위원

2) LG경제연구원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9", KDI 경제전망(2019 하반기) 인용

국민 먹거리 보장 강화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

- 식품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필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식품지원제도의 도입과 개선 추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분권, 포용, 혁신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 추진

- 지방분권,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등의 국정외제들과 보다 연계된 지역단위에서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 필요
- 치유, 문화·여가, 휴양, 공동체 활동 등 농촌의 내재적 가치 활용과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해 농촌다움 (Rurality)을 회복하고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필요

1.2. 농업·농촌 내적 여건

농업·농촌의 공익성 강화하는 정책환경의 변화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추구

- 공익형직불제법 도입, 물관리 일원화 제도 강화에 따른 환경관리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농촌정책의 강화
- 농업·농촌의 공익성 향상, 쌀 수급불균형 완화, 농가 간·품목 간 형평성 개선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함께 농산물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

저성장 국면과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고용률, 고령화 등으로 노동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

- 농식품 신규수요 창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촉진 필요
- 농촌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 일부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문제 대응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과 국민의 농업·농촌 인식 개선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 대책 추진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 필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안요인의 상존

평년기온보다 높은 겨울날씨의 지속은 원예농산물 등의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

02

2020년 10대 농정 이슈

2.1.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³⁾

공익증진 기여 지불 방식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

- 기존 직불제가 대규모 농가에 지원 집중, 쌀 편중 지원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자원 및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과 2조 4,000억 원의 재정 투입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함.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성됨.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 설계

- 경지면적 기준 지불에 따른 대농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함. 지급 대상 소농의 범위 설정, 지급 규모의 합리성 확보, 경지면적 분할(속칭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실효성 있는 교차준수사항 마련 및 농가의 적극적 실천

- 공익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공익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농가가 영농활동 과정에서 환경 및 자원 보존과 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부는 농가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모니터링 가능한 교차준수 사항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농가는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 제고를 위한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도입

- 공익직불제로의 전면개편은 농업의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정책 방향 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수준을 넘어서 물·토양 등의 환경 보전, 환경친화적 농법 적용 등을 전인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해야 함.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 해소 필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

-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는 마련하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3)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2.2.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⁴⁾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농업 패러다임 전환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 AI, 복합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의 농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필요

- 농업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문제 해결,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의 안전성 추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이 보급되어 왔으나, 향후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역할 전환을 의미함.

스마트농업의 실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단계로의 확대, 제품의 표준화, 다부처 간 협력 등을 통해 가능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센터 필요

- 스마트농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정형데이터를 축적하고, 정형데이터와 반정형·비정형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함.

단계별 밸류체인 스마트화 전략 마련

-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함.

스마트농업의 커넥티드팜(Connected Farm)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이 품목(축종)별 개별 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 시범사업을 추진함.

스마트농업 제품의 국가·국제 표준화를 통해 플랜트 수출 확대

-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은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고 내수시장은 협소함.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에 R&D 투자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기의 국가·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스마트농업 거대 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플랜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확산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사업 추진

- 스마트농업 확산은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실용화·사업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계부처, 농가 및 농산업체, 연구개발기관, 관련 지원기관 등의 협력·연계를 촉진하는 다부처 간 협력체계 및 사업 추진 필요

4)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서대석 연구위원

2.3.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⁵⁾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 인식 제고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 필요

- 정부는 국민 먹거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식생활 정책에서 포용성을 강조한 정책 추진 요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농식품바우처제도의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 기틀 마련 필요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국가 실현을 위한 범부처 통합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

- 국민 먹거리 보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부처 간 연계 강화와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현장 실행력 확보와 지역 먹거리 연계성 제고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용적 국민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식품지원제도 확대와 범부처 협력 강화로 먹거리 포용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관련 시범사업/실증연구를 통해 본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발굴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본사업을 위한 유통업체 POS 시스템, 정산시스템, 수혜자 정보관리시스템도 사전적으로 개발해야 함.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지원사업과 타 사업과의 연계 강화 추진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2개 기본법 및 20여 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식품지원제도들을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식품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 및 국민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역 단위 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5) 김상효 부연구위원, 황윤재 연구위원

2.4.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⁶⁾

지난해 농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산업발전대책 수립

생산·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실태를 분석하고,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 마련

- 1인 가구 증가·맞벌이 가구 증가 등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경향 확산에 따른 신선농산물 수요 감소, 기상 여건 호전에 따른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한 수급과 가격 불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행할 계획임.

2020년 농식품 예산에 원예농산물 수급관리사업 재정 투입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등의 예산 확대

- 조기출하·격리·폐기 등 산지 단계에서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51억 원이었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242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물량을 배추·무·마늘·양파·고추 5품목의 생산량 대비 15%로 확대함.
- 농업관측 강화로 농업인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을 추진 하도록 유도함.
- 소비 트렌드 변화와 품목별 소비 변화 등을 고려한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함. 이를 위해 현장실측 조사 확대,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품목별 소비 관측 등의 사업 예산 169억 원을 책정함.

지자체, 생산자조직, 유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제고

- 수급 조절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수급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지자체는 사전적인 재배면적 조절이나 수급 사업에, 농협·도매시장 등은 수급 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 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생산자조직이 주도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여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농협, aT,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전국 단위 품목별 생산자 조직 설립 방안을 마련해 수급관리와 유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성공 사례를 통해 구체화함.

6)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2.5.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⁷⁾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 환경오염 유발, 토양 양분 과잉

- 축산 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7년 6,112건으로 해당 기간 2.3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악취에서 축산 악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7% 늘어남. 특별점검 결과, 10% 내외가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토양의 질소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인 수치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질소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 인 수치는 9.1배 높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실습 교육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가축의 공장식 밀식 사육으로 가축질병에 취약하며,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는 0.2%에 불과

- 밀식 사육은 가축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란계 농가의 경우 살충제 과다 사용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EU는 동물복지 사육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복지 기준이 미흡함.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비중은 전체 사육농가에서 0.2%에 불과하며, 인증농가의 절반 이상이 산란계에 집중됨.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 대책 추진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2021년 도입될 예정이며 2019년에 시범사업이 추진

- 양분관리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관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양분관리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도 필요함.
- 경지면적 감소, 양분 과잉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 악취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ICT를 활용한 축산시설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취 방지시설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임.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업으로 전환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동물복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

- 농장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 금지, 모돈의 감금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김현중 부연구위원

2.6.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⁸⁾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5개년간 새롭게 시행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4년)에 포함된 범부처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2005년 범부처 계획으로 처음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과 대상 과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왔음.
- 2020년 제4기로 접어드는 기본계획에서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면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중앙 및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기본계획 시행과 병행해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실험을 뒷받침할 중앙 및 지자체 기반 구축 필요

-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서비스 혁신 실험(예: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생활권 육성과 연계한 교통 모델 운영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책 활용, 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의 정책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함.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전달 실험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도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OECD 국가들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원격 교육 서비스 등의 혁신적 미래 기술을 삶의 질 관련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지자체 단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

- 지금까지 지자체 단위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드물어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중앙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 농촌 특성에 맞도록 시행되려면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임.
- 특히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수단(예: 농촌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

중앙부처 간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필요
- 부처 간 정책 조율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충실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평가 등의 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8) 성주인 연구위원

2.7.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9)

고령화·과소화로 인적자원 문제가 지속

농업 인력과 함께 지역 활동가에 대한 수요 증가, 유입 인구 불충분

- 농촌지역 공공적·사회적 활동 분야의 경우, 환경, 수자원, 교육·문화, 사회 서비스 분야의 활동 및 정책이 늘어나면서 사업기획, 소통, 조직화에 종사할 활동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가 상시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거주 외국인 노동력을 충원하여 보완하고 있으나 한계점이 존재함.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유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농촌 간 연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됨.

농촌 유희 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 및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

-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시행 주체가 되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 노후시설의 다양한 용도 활용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공사비를 상향 조정(3억/개소→4.5억)할 예정임.
- 유관 기관(농협·6차산업 지원센터·청년벤처컨설팅 등)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들의 경영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대농지·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영농정착시 초기 부담을 완화하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중임.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예비 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실습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예비농업인에게 확대하고, 농어업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학기당 500명)할 예정임. 또한, 미래농업선도 고교('19, 3개소 → '24, 10)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19, 5개소 → '24, 10)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전문·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인턴 채용 시 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인턴 6개월 + 정규직 채용 시 3년 추가)할 계획임.
-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9) 김정섭 연구위원 감수

2.8.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¹⁰⁾

농촌의 잠재력과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 필요

귀농·귀촌 확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등 농촌 공간잠재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고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미비

- 귀농·귀촌 인구는 2018년 약 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주인구 중 2·30대 젊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49%)을 차지함. 국민 중 10%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 생태자원·자연경관·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사회적 농업, 마을기업·농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이 증가함.
- 농지에 농업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증가하는 농촌개발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 미비로, 난개발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 필요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앙정부가, 배후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밀착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자체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일부 농촌 지자체 내의 과잉 투자로 인한 난개발 또는 투자 축소로 인한 저개발이 우려됨.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공통의 원칙하에 계획적 개발 추진 필요

- 농지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공간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사업 추진, 관련법의 일치성 강화 등을 통해 농촌의 잠재력 확대와 가치 증대가 필요함.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틀 마련

- 지자체 스스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및 지자체의 자체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제공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정책 실현을 위한 농촌협약제도 시범 도입·운영

-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목표와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함.
- 2020년 9개 지자체 대상의 통합적 공간계획 수립 및 협약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한 후 보완·확산함.

10) 한이철 부연구위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2.9.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¹¹⁾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 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

-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

농촌주민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

-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 국민수용성은 높은 반면, 실제 발전소가 입지하는 농촌지역의 주민수용성은 현저하게 낮은 실정임. 2016년 허가가 반려·보류된 태양광, 풍력 사업의 37.5%가 주민 반발에 기인함(정성삼·이승문 2018).¹²⁾
-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도는 낮은 주민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초기 투자자금의 조달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이익공유제도 적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배당금이나 마을발전기금 등과 같은 이익공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역주민의 수용성 개선, 사업의 지속성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측면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

지자체 참여 유도 및 지자체 규제 검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 강조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의 지역 환원과 무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방지 및 우량농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구체성이 부족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허가기준 및 규정이 지자체별로 상이함. 따라서 입지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산지에서의 경사도와 도로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에 농경지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11) 박지연 연구위원

12) 정성삼·이승문. 『신재생 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10.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¹³⁾

신남방·신북방 및 남북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점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

-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 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2017. 8.)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5개)과 중점과제(14개)를 제시(2018. 12.)하였음. 12번째 중점과제인 ‘신북방 농업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진출 지역의 확대, 진출분야 및 품목 확대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위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2018. 8.)하고 ‘사람/번영/평화’라는 기치하에 16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이 중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협력’(11번) 과제를 통해 농산업을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실현을 제안

-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평화경제를 구축하여 남북이 함께 번영할 것을 제안한 만큼, 평화경제에 부합하는 농업부문의 대북 협력 준비도 필요함.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방안 필요

농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투자 지원방식과 병행하여 추진

- 현행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방식과 함께 농림수산물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출자하는 투자방식을 병행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

-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함.
- 현행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 농업 투자협력 지원센터 설립,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화경제 실현의 농업부문 대응 방안으로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추진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과거 추진했던 경험이 있거나 남북한 당국 간에 합의했던 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재정비하여 남북 간 협력 환경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교역과 투자 등 상업적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지향형 농업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함.

13) 김종선 부연구위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2020년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19년

- 제185호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이정민·우성휘·이명기·박혜진)
-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김상호·이계임·임소영·허성윤)
-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희,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익식)

-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엄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익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해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엄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욱,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욱,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입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박기환 선임연구위원 061-820-2331 kihwan@krei.re.kr
내 용 문 의 이명기 연구위원 061-820-2011 eshwang@krei.re.kr

집필진 담당 내용	집필진	전화번호	전자메일
2020년 농정 여건	이명기	061-820-2166	mkleee@krei.re.kr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박준기	061-820-2173	jkpark@krei.re.kr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김연중	061-820-2256	yjkim@krei.re.kr
	서대석	061-820-2260	dssuh@krei.re.kr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김상호	061-820-2218	skim@krei.re.kr
	황윤재	061-820-2247	yjhwang@krei.re.kr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국승용	061-820-2275	gouksy@krei.re.kr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정민국	061-820-2263	mkjeong@krei.re.kr
	김현중	061-820-2021	kim1025@krei.re.kr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성주인	061-820-2199	jiseong@krei.re.kr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김정섭	061-820-2252	jskkjs@krei.re.kr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한이철	061-820-2304	yhan@krei.re.kr
	송미령	061-820-2351	mrsong@krei.re.kr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박지연	061-820-2330	jiyunpark@krei.re.kr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김종선	061-820-2210	sun589@krei.re.kr
	김영훈	061-820-2367	kyhoon@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1.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